

소득따라 기초연금 차등... 국민연금 심의·운용 이원화 논의

정치권 '연금개혁' 재시동
보건복지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하반기 개편방향 설정·단계적 추진
여당,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논의
"1600조 국민자산, 구조개혁 시점"

연금제도의 보장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논의를 본격화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금 제도의 운영과 기금 운용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법 논의를 미뤄왔던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하반기 원 구성 이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 만큼, 연금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논의
정부는 기초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홍배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졌고, 고령화로 제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 장관은 "하반기 내 기초연금 개편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뒤 전체적인 지급액을 줄이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노인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도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22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향후 10년 동안 5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소득 하위 30% 노인의 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대신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낮추면 21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공론화

여당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박홍배 의원

을 비롯해 8명의 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한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제도의 운영과 기금운용을 모두 맡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기금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상존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나눠, 기금운용 기능을 복지부 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박홍배 의원은 "16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산을 과거 체계에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의 기금 규모에 걸맞은 독립성과 책임성,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균형있게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연금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검토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 논의에 참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은 지난 2월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오는 7월 중 제도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기관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이 높은 운용기관이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의 투자지식이 부족해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 시 기존 운용기관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복잡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공단의 기금형 사업 참여는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고, 작은 모델을 만드는 수준인 만큼 민간 금융기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며 "연금공단의 참여 시 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규제·빚투 영향... 카드론 43조 역대최대

삼성·신한·현대 등 카드사 9곳 합산
롯데 579억 증가, 이어 신한 564억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573억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신한카드(+564억원), NH농협카드(+545억원), KB국민카드(+425억원), 현대카드(+37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카드론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 4월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 4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출 풍선효과와 빚투 수요 확산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특히, 증시 호황으로 빚투 수요가 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통상적으로 카드론 잔액은 5월에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66억원 증가했으나 올해는 2704억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 수요 증가와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외 다른 대출 서비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7억원으로 전달 보다 3072억원 확대됐다. 결제성 리

빙빙 잔액은 6조7999억원으로 934억원 증가했다. 대한대출 잔액은 1조6559억원으로 576억원 늘었다. 대한대출은 기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준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투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2금융권 대출 과열을 방어하고 나선 것.

다만, 업계는 인위적으로 카드론 수율을 조절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카드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의 영역"이라며 "고객의 수요가 있는데 이를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어디까지는 대출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금융-소진공, 청년 소상공인 정착 지원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 추진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전국에 분포한 60개 지역상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약 4000여 곳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성과 확산형 통합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4년간 총 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상권 단위의 역량강화 교육,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상권 활성화, 홍보를 연계한 '하나 On, 청년 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청년 소상공인의 지역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활용, 고객관리, 사업운영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정책 이해와 매출 전략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소상공인이 직접 상권 활성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상권 소상공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형 14개 팀과 전국 단위 특화형 1개 팀을 선발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우건설,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시연

과천 'G-TOWN' 현장서 간담회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소통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아침조회와 TBM

(Tool Box Meeting), 각종 안전교육 내용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CCTV 스마트 통합안전관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위험 행동이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위치 관계 기능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의 체계성을 높인

다. 또한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보호구 미착용, 화재 발생, 근로자 쓰러짐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감지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태블릿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규 근로자는 태블릿을 통해 기초 문진 및 면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13개 국어를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도 언어 장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 문서 중심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페이퍼리스(Paperless) 현장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유튜브·SNS 불법 코인 영업 '주의보'

금융위 FIU, 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만큼 거래 전 신고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FIU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시 자금 세탁방지 및 이용자자산 보호장

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한 뒤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나유리 기자